

# 2015 5대 인권뉴스 및 인권주간사업 발표 기자회견

- 오늘의 인권현실에 대한 인권단체 대표 발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 (NCC) 조규천 목사 >

-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및 인권주간 조직위 사업계획 발표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 > ---(2~27p)
- 인권침해 당사자 증언발언  
<변홍철 시인 >(박근혜대통령 비판 명예훼손으로 재판 진행 중)
- 기자회견문 낭독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대표 >---(28-29p)

## 2015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대구  
경북인권연대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  
연대 대구민예총(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연대 대구이주민선교센  
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장애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통일시민  
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YMCA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행동  
무지개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오리알(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  
조대경지부 정의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천주교대구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포럼다른대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NCC) 한국인권행동 4.9인혁재단 615대경본부 (총 39개 단체)

## 2015 대구경북 인권뉴스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

### I. 설문조사 개요

- \_ 인권뉴스 후보군 모집 및 확정 : 11월 1일(수) ~ 20일(금)
- \_ 인권뉴스 설문조사 : 11월 25일(수) ~ 12월 7일(월)
- \_ 인권뉴스 설문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 : 12월 10일(목) 오전 11시 / 대구구치소 앞

#### ○ 28개 대구경북 인권뉴스 후보군 선정 기준

- \_ 대구경북지역의 인권현안 중 영향력의 기준
- \_ 인권침해 당사자가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
- \_ 인권침해 및 인권증진운동이 대구경북지역과 맞물린 인권사안

#### ○ 인권뉴스 설문조사 과정

- \_ 조사 방식 : 직접설문 및 이메일을 통한 설문
- \_ 설문 대상 : 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활동가/ 지역 언론인(사회부)/ 대구시민 일반 (총 342명)
- \_ 선정 방식 : 설문지 배포 및 수집을 통한 종다수를 5대 인권뉴스에 반영
- \_ 발표 방식 : 세계인권선언 67주년, 2015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기자회견

### II. 2015 대구경북 인권증진 뉴스

- 대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개관
- 반인권적 거리급식에서 실내 무료급식소 개소, 이제 준비 걱정 없어요
  - 법정 구속되었던 청도 송전탑 반대 활동가, 항소심서 무죄
  - 복지시설 뒤 급속공장 '불허', 장애인 인권 지켰다
  - 경북지역 교사 2명, '국보법' 누명 벗다
  - 대구 청암재단, 장애인 거주 시설 "탈시설화" 선언
  - 경북 군위에 경북 도내 첫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건립

### III. 설문조사 결과 - '2015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 < > 408일 골목 농성 마친 차광호, "자본과 싸움 끝나지 않았다"
- <공권력 - 국가행정기관의 인권침해>  
경찰, 총파업 불대포로 저지.. 4.24총파업 인권침해조사단 "얼굴 조준해 분사·과잉진압"
- <자유권>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한 시인의 구속, 표현의 자유의 정면 도전
- <사회권 - 빈곤·생존권> 장애인 언니 둔 20대 자살...기초법·복지 사각지대가 만든 비극
- <환경권> 영덕군민...91.7% "핵발전소, 난 반대세"

< >

- , 복귀한 파업참가자 노동조합조합원에게 정신교육을 진행 (23명)
- 408 굴뚝 농성 마친 차광호, "자본과 싸움 끝나지 않았다" (119명)**
- 대구 신규 일자리 64%가 임시직... "눈 가리고 아웅" (12명)
- 남구청, 청소위탁업체 의혹 제기 노동자 5명 모두 해고 (7명)
-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동자 26명 해고 (37명)
- 경북대병원, 정규직은 푸드코트, 비정규직은 알아서 먹으라 (15명)
- 노조 결성 한 달...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 (24명)
-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해고 (12명)
- 대구교육청, 학교정규직 13만원 vs 비정규직 0원... 밥값 차별 (25명)

### <공권력 - 국가행정기관의 인권침해>

- 경찰, 노동자 총파업 물대포로 저지.. 총파업 인권침해조사단 "얼굴 조준해 분사·과잉진압" (152명)**
- 대구지방경찰청, 대구퀴어축제 '퍼레이드' 금지 통보 (37명)
- 임금체불 항의 데이지건 쏜 경찰, 형사 입건까지...공권력 남용 논란 (29명)
- 인터넷신문 등록 규제, 85%의 인터넷신문사 해산 (36명)
- 경찰, '신은미 콘서트' 연 대구 시민단체 계좌 압수수색 논란 (13명)

### <자유권 - 구금시설의 인권침해>

-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한 시민구속, 표현의 자유 정면 도전 (153명)**
-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 다시 청구, 판사가 앞장서 공판기일 연장 (14명)
-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그린 시인, 벌금 100만 원이 선고 (38명)
- 대구지방법원, 정도 송전탑 공사 저지 시인 구속 (42명)

### <여성 인권>

- 2015 대구 성평등 디딤돌상·걸림돌상 대구교대가 싹쓸이 (27명)
- 포항 영포새마을금고의 성추행 파면 간부, 적반하장 복직 요구 (12명)
- '성폭행' 혐의 (전)심학봉 의원, 경찰 첫 소환조사 (32명)
- 사라진 미혼모 쉼터... 대책' 없는 대구경북 지자체, 새 쉼터는 아직 공사 중.. (42명)

### <이주노동자 인권>

- 출입국관리소 단속중 이주노동자 골절상... "실적채우기 단속중단" (63명)

### <청년 인권>

- 대구시의원, 청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 (43명)
- 3차 면접까지 봤는데 합격자가 없다...대성에너지 '채용 갑질' (51명)

### <아동·청소년 인권>

- 대구 을지연습 '서바이벌 사격체험'에 어린이 참여 논란 (78명)

### <성소수자 인권>

- 지역 첫 성소수자 인권단체 "무지개인권연대" 출범 (27명)
- 대구퀴어축제, 국가기관과 종교세력의 탄압에도 '사랑'과 '자긍심'이 혐오 이겼다 (56명)

### <장애인 인권>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탈시설 정책에 역행하는 장애인 수용 시설, 반대 (44명)
- 장애학생 폭행사건 H대, 피해자지원·재발방지대책 마련 약속 (14명)
- 대구 동구주민, 장애인 시설 반대에 '장애인 버하' 현수막 걸어 (21명)
- 구멍 난 제도에 고통 받는 장애인 공무원, 법개정이 되었지만 근로지원 전무 (7명)
- 고속버스 승객이 될 수 없는 장애인... "추석, 고향 가고 싶다" (37명)
- 장애인 수용시설 속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 "발달장애인 일시키고 월 5만원 지급" (11명)

### <사회권 - 빈곤·생존권>

- 장애인 언니 둔 20대 자살...기초법·복지 사각지대가 만든 비극 (122명)**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없어도 무작정 일자리로 내몰려 (22명)
- 정부 '복지재정 효율화' 요구, 대구시 복지재정 축소 우려 (16명)

### <환경권>

- 대구지방법원, "청도송전탑 농성 주민, 한전에 최대 9,600만원 지급하라" (35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표결로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4월 재가동 (15명)
- 국민 물 먹이는 세계물포럼? "물 사유화 위한 것" 지적 (8명)
- 영덕군민...91.7% "핵발전소, 난 반달세" (124명)**
- 한국도로공사, 천연기념물 1호 측백나무숲 주변 도로 공사...주민, "공사중단" (14명)

### <평화권>

- 사드 배치...역설적으로 집권 여당이 한반도 평화 위협 (34명)

### <과거사 -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특별법으로 진실 밝혀야" (21명)
- '83년 대구미문화원 폭파' 누명쓰고 고문·투옥당한 이들, 재심청구 (18명)

#### IV. 설문결과 분석 및 총평

1) 5대 인권뉴스 선정의 목적은 2015년 한 해 동안 인권관련 주요 사건들을 되돌아봄으로써, 대구경북사회가 일구어 온 인권증진의 성과는 보존하고, 인권침해의 사례는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인권침해자의 반성을 재확인하는데 있다.

2) 2014년 대구경북 인권뉴스 선정을 준비함에 있어, 성과와 실패 그리고 발전과 퇴보를 동시에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45개의 인권뉴스는 점점 심화되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히 올해 45개나 되어 매해 진행되고 있는 인권뉴스 후보군 중에서 가장 많은 인권뉴스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대구경북지역 인권침해의 사례, 규모, 그리고 다양한 영역의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인권증진의 성과적 사례를 6건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다소나마 위안을 될 수 있었다.

3) 2015년 대구경북의 인권의 지표는 전 영역에서 기본권과 인권의 후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5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로 선정된 인권침해 사례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 “408 골목 농성 마친 차광호, 자본과 싸움 끝나지 않았다”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자본의 일방적인 이윤에 대한 항거, <공권력 - 국가행정기관의 인권침해> ”경찰, 총파업 물대포로 저지.. 4.24총파업 인권침해조사단 얼굴 조준해 분사·과잉진압” 으로 드러나듯이 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고 경찰과 공권력에 의해서 무참히 유린당하였으며 <자유권 - 구금시설의 인권침해>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한 시민의 구속, 표현의 자유의 정면 도전”의 사례처럼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대통령 비판마저도 구속시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토대마저 무너진 오늘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권 - 빈곤·생존권> “장애인 언니 둔 20대 자살...기초법·복지 사각지대가 만든 비극” 처럼 빈곤에 굴레에서 구조적인 복지사각지대에 신음하면서 극단적인 자살을 통해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의 질곡을 증언하는가 하면 <환경권> “영덕군민...91.7% 핵발전소, 난 반달세”의 사례처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핵전력수급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는 생명과 평화를 지키겠다는 주민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며 반인권적인 정책은 여전히 것이 사실이다.

이들 모두 어느 사회에서나 약자와 소수자이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방향 정도는 우리사회 인권지수를 가능하는 척도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대구경북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4) 지방정부를 비롯한 광범위한 정부기관의 인권침해현상이 심화되고 두드러지고 있다. <노동인권영역> <경찰이라는 공권력과 법원의 국가행정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출입국관리소의 무차별적인 폭력단속>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허가제처럼 남용하는 경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며 오히려 지방정부(대구광역시/중구청)과 대구지방경찰 그리고 검찰에 이르기까지 인권침해의

카르텔이라 할 정도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침해가 지역사회 저변에 퍼져 있다. 공공병원이라 말하는 경북대병원은 파업에 복귀한 노동자들에게 정신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차별을 가하는 가하면, 경북대병원에서 주차관리노동자 26명 해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야간근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에게 푸드코트, 비정규직은 알아서 먹으라고하는 차별을 병원내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5)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 폭력, 추방 (아동,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 단속 또한 끊이지 않는다.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이에 항의하면 ‘공무집행 방해’라고 연행까지 하고 있다. 대구시 북구 침산동 한 공장에서 일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출입국의 단속을 피하려다 골절상을 입었으며 실적채우기에 무차별적인 폭력단속이 관행화되고 있다.  
 - 대구시는 전염연습이라고 하는 을지연습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대구시청 앞에 마련된 체험 부스에 다수의 어린이를 참여시킨 것이다. 을지연습 기간 중 “시민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대구시가 마련한 서바이벌 사격 체험 등의 행사에 어린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일선 교육기관에 참여요청 공문을 통해서 평화권보다 폭력과 전쟁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아동의 인권침해를 야기시켰다.  
 - 올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 혐오집단(호모포비아)에 의해 힘겹게 진행되었다. 중구청의 대백악 무대불허와 대구지방경찰청의 집회시위 행진의 불허 그리고 기독교단체의 조직적 방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혐오와 차별이 대구시내를 가득 채웠다. 더욱이 축제 당일, 이들은 종교행사를 가장하여 행사 장소를 둘러싸고 축제 참가자들에게 혐오발언과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기독교단체의 방해와 혐오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와 시민들은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루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무지개인권연대라는 성소수자인권단체를 출범시키는 조직적 성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폭력이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분위기와 다르게 한국의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  
 - 대규모 시설에 집단 수용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인권의식은 제자리 걸음이다.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을 포함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인식이 저열해서 고속버스는 장애인에게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로 또한 대구에서 현재 1,600여 명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역사회가 아닌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 중 70%가 ‘지자체가 지원한다면 시설에서 나오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 정책이 수용시설 확충이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가장 큰 차별은 ‘존재’에 대한 차별이다. 모두가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을 떠나야만 받을 수 있다. 단속과 폭력을 당하지 않을까 항상 마음 졸이며 길을 걸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광장에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은 혐오발언과 폭력으로 추방당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다. 자신의 ‘존재’가 혐오와 폭력을 견뎌야 하는 이유가 되는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여전히 온전한 권리를 박탈당한 ‘2등 시민’이다.

## V. 2015년 대구경북 인권뉴스

< >

□ , 복귀한 파업참가자 노동조합조합원에게 정신교육을 진행  
 경북대병원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는 1월 1일부터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다수 조합원이 업무 현장으로 복귀하고, 지명파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명파업은 부분파업의 일종으로, 특정 조합원을 지명해 파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 간부 5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조원 300여 명은 1일부터 정상 근무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휴무인 1월 1일을 보내고 출근한 2일, 업무 복귀를 할 수 없었다. 경북대병원노조가 36일 파업 후 대다수 조합원의 현장복귀 결정을 내렸지만, 병원 정상운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병원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해 업무복귀 대신 교육프로그램 참가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는 “병원 정상화 시도를 막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지만, 병원은 “파업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병동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병원이 파업 참가자 다수에게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 408일 골목 농성 마친 차광호, "자본과 싸움 끝나지 않았다"  
 골목 농성 408일의 '슬픈 신기록'을 세운 스타케미칼 노동자 차광호. 그가 농성을 마무리 짓고 내려왔다.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장장 집행을 고집했고, 이 때문에 오후 2시에 내려올 예정이었던 차광호 씨는 결국 오후 7시 20분야야 내려올 수 있었다. 노사는 7일 스타케미칼 해고자 11명에 대한 고용보장과 함께 민형사상의 고소도 모두 취하하겠다고 합의했다. 이외에도 ▲ 2016년 1월부터 정상 고용 ▲ 스타케미칼 공장 가동 시 고용승계 ▲ 스타케미칼의 모회사인 스타플렉스가 신규 법인 설립할 시 고용도 보장하기로 했다. 차광호 씨는 20여 년 전, 지금의 스타케미칼 이전 회사인 한국합성에서 일을 시작했다. 스타케미칼 인수 당시 5년간의 투쟁으로 고용승계를 이뤘으나, 1년 8개월 만에 공장이 멈췄다. 2013년 사측은 분할해각을 시도했고 금속노조 스타케미칼지회는 사측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해고자 28명 중 11명이 복직 투쟁을 벌여왔다.

□ 대구 신규 일자리 64%가 임시직...“논가리고 아웅”  
 대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질보다는 양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의 최근 늘어난 일자리 중 64%는 임시직이다. 대구시청에서 열린 2015년 국회 안정형 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구시에서 창출한 일자리 14만 9천여 개를 분석한 결과 64%가 취약계층과 건설분야 임시직"이라며 "일자리 창출로서 의미가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이 대구시에 받은 일자리 창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대구시 신규 일자리는 14만9천여 개다. 이 중 64%인 9만6천여 개가 건설일용직, 공공근로를 통한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이었다. 진 의원은 "대구시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8억6천만 원 예산을 투입했다. 2,209명 일자리가 창출됐는데, 이 중 재취업 인원은 1%에 불과하다. 이 부분도 성과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의의가 있으려면 질적 성장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권영진 대구시장, 공기업 임금피크제, 대구가 선도하겠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든 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북구 산격동 엑스코(EXCO)에서 열린 '대구·경북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 개막

식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구가 노동개혁을 선도하겠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모든 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시장은 "대구 는 노사평화도시, 규제개혁 1등 도시를 만들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노사장이 협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 공기업 5곳 중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관리공단 노사가 내년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다. 대구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환경공단, 달성군 시설관리공단도 조만간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남구청, 청소위탁업체 의혹 제기 노동자 5명 모두 해고  
 대구일반노조 남구청환경미화원지회는 지난 7월부터 대구시 남구청 위탁업체인 J청소업체가 청소업체가 남구청과 맺은 계약 내용을 위반하면서 임금을 착복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노조가 설립된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조합원 5명이 모두 해고됐다. 지난 6월 노조 설립 후, 조합원 2명이 해고됐고, 7월 1명이 해고됐다. 또, 지난 8월 19일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기자회견 다음 날인 20일 1명이 해고됐다. 이들의 J청소업체와 계약한 기간은 11월까지였다. 이들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위탁업체가 바뀌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통상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왔다.

□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동자 30여명 해고  
 경북대병원에서 주차관리 용역노동자 해고 논란이 불거졌다. 도급 업체를 교체하며 병원이 정원을 줄여 일부 조합원의 고용승계가 어렵게 됐다. 이에 노동자 30여 명이 해고 상태에 놓이게 됐다. 경북대학교병원은 본원(35명)과 칠곡경북대병원(9명), 치과병원(3명)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도급 계약을 통해 운영한다. 문제는 병원이 기존 용역 업체와 계약 만료를 앞둔 9월 본원의 주차관리 인원을 4명을 줄인 31명으로 임찰공고를 내며 시작했다. 본원의 주차 차량 대수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이유다. 병원의 입찰 공고에 따라 4명의 노동자가 쫓겨날 처지에 놓이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민들레분회)는 '전원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은 '인원 감축' 입장을 고수했고, 10월 1일부터 새로운 주차관리 업체가 들어왔다. 새 업체인 (주)리더스디벨먼트는 1일 병원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노동자를 제외하고 별도로 모집한 이들을 주차 업무에 배치했다. 노조는 "병원이 작년 9월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방안 경영 개선을 빌미로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개악하고 인건비 줄이기에 혈안이 됐다. 비정규직 해고를 통해서도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이 인원감축으로 주차관리용역노동자를 버랑 끝으로 내몰고, 하청업체가 등을 밀었다"고 밝혔으며 해고자복직 투쟁을 위해 줄기차기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 경북대병원, 정규직은 푸드코트, 비정규직은 알아서 먹으라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경북대병원 본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 없는 식사 제공"을 요구했다. 병원은 지난해 경비 절감 등의 이유로 병원 식당을 점심시간에만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 저녁 식당 운영을 중단하면서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간호사, 의사들에게도 불만을 샀다. 이에 병원은 정규직에 한해서만 푸드코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밖에 나가 사 먹는 수밖에 없다. 저녁 식사를 해야 하는 오후반 청소노동자는 모두 14명이다. 이 중 수술실에 근무하는 2명은 밖으로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며 정규직 직원에게는 병원이 도시락을 수술실로 가져다주지만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 결성 한 달...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  
아사히글라스 해고 문제 논의 자리서...“노조 안 하면 안 되느냐?”

경북 구미의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아사히글라스가 노조가 결성된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회사는 계열사 PDP 생산이 중단돼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아사히글라스사내하청노조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공장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하청업체는 노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도급계약이 해지되면서 우리도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희망퇴직자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노조 설립과 도급계약 해지 관련성을 전면 부정했다. 이와 관련해 차현호 아사히글라스사내하청노조 위원장은 “물량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계열사 공정이 멈춘 지는 꽤 됐다. 그런데 왜 하필 노조를 설립한 지 1달 만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까”라며 “6월 30일 회사가 전기 공사 한다면서 전원 다 쉬라고 했다. 공장이 생긴지 9년 만의 일이었다. 우리를 공장에서 내보내고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한 거다”라고 말했다. 노동부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며, 이를 이유로 사내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 설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례도 있다.

□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되며 조리원 해고

경북 구미의 한 학교에서 급식인원 감소가 예상되며 조리원을 해고했다. 경북 구미시 천생중학교 조리원 K씨는 해고(공식 문서 이름은 계약만료 통보서) 통보를 받았다. 급식 인원이 앞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리원의 TO도 줄게 될 것이라는 이유다. 자녀 셋을 둔 K씨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계속 고용을 기대하며 조리업무에 충실했으나, 결국 해고됐다. 경북교육청은 ‘학교급식 목표 및 기본방향’을 통해 급식 인원이 900명 이상인 경우 8명의 조리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급식 인원이 900명 이상인 천생중학교는 현재 조리원 7명을 고용한 상태다. K씨는 2014년 9월 22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2015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17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 대상이 아닌 한시적 채용 대상자’라고 돼 있고 노동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 위법사항은 없다.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 날벼락이다. K씨는 당장 생계 곤란에 빠졌다. K씨의 해고로 동료 조리원의 업무량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이유도 없이 학생 수가 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업무에 숙달된 조리원을 해고하는 것이 가당한 일일까. K씨와 동료 조리원은 K씨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했다. 노조는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 1년 단위 계약을 피하려는 ‘쪼개기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천생중학교도 무기계약직 고용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에 ‘신규채용 승인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구교육청, 학교정규직 13만원 vs 비정규직 0원...밥값 차별

학교급식조리원은 아침 일찍 출근해 오후 늦게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밥값조차 못 받는 학교비정규직 신분이다. 대구시교육청이 비정규직에게 책정한 급식비는 0원이기 때문이다. 급식 후 잔반과 밥이 있으면 그것으로 늦은 점심 한 끼를 먹고 그것도 없을 때는 퇴근까지 굶어야 한다. 도시락을 싸고 싶어도 외부음식 반입은 금지됐다. 밥 만드는 일을 하지만 정작 밥값도 못 받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대구교육청이 그 동안 0원이었던 학교비정규직 급식비를 내년부터 정규직 13만원과 동등하게 지급하기로 구두합의하고 최근 이를 철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해 금액을 조정 중”이라고 해명한 반면, 노조는 “예산을 핑계로 비정규직을 기만했다”며 “즉각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 - 국가행정기관의 인권침해>

□ 경찰, 노동자 총파업 물대포로 저지, 4.24 인권침해조사단 “얼굴 조준해 분사·과잉진압”  
대구 경찰이 지난 4.24 대구지역 노동자 총파업 집회에서 노동자들을 향해 쏜 물대포와 최루액이 경찰 규정과 국제기준을 위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4.24 총파업 인권침해조사단은 지난 5월부터 석달 동안 4.24 총파업과 관련한 참가자 인터뷰, 당시 사진·문건·동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이날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냈다. 조사단은 보고서를 통해 당시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살수차의 과도한 사용과 살수차 운용 지침 위반 ▷집회 참가자를 향한 물대포 직사 분사 ▷최루액(캡사이신) 등 분사기의 부당 사용 ▷경찰 신분 식별 불가함 ▷경찰관 기동대의 불공정한 투입 ▷무방비 상태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과잉 폭력행위 ▷남성경찰의 여성 참가자에 대한 폭행과 신체적 접촉 등 “경찰의 명백한 과잉진압으로 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진압과정에서 경찰 대규와 국제기준도 위반했다.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842호)'을 보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물대포(물포)에 대해서도 "타인 또는 경찰 생명·신체 위해와 재산·공공시설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에 사용하고 안전거리에서 쏘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후 3시 30분쯤 범어네거리에 결집한 이들은 새누리당사로 갈 수 없었다. 경찰병력 1천3백여명이 방패를 들고 순식간에 범어네거리에서 새누리당사로 가는 도로를 막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대구 집회 처음으로 물대포를 쏘다. 최루액도 2년만에 사용했다. 대치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이날 전국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물대포나 캡사이신 등으로 진압한 곳은 대구가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 40여명의 노동자, 학생, 농민들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민주노총 간부 4명이 구속됐다.

□ 대구지방경찰청, 대구퀴어축제 '퍼레이드' 금지 통보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 측에 “행진 전 불특정 다수 행인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집회는 받아들여지, 집회 이후 참가자들이 행진하는 ‘퍼레이드’는 금지한다는 설명이다. 조직위는 퍼레이드 금지 통보에 즉각 반발했다. ▲ 지난 여섯 차례의 집회에서도 퍼레이드가 금지된 적이 없으며 ▲ 기독교 단체에서 신고하지 않은 3일과 5일마저 금지를 통보했고 ▲ 통상적으로 참가자가 수천 명이 넘는 집회와 행진도 금지하지 않아왔다는 것이다.조직위 관계자는 “교통방해라는데 고작 1천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다. 5천 명이 넘는 집회와 행진도 금지하지 않는데 기독교 단체가 집회를 신고하지도 않은 3일과 5일마저 금지했다”며 “1년에 단 하루 성소수자의 인권과 문화를 위한 축제를 이렇게 탄압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원통하고 슬프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대구시와 중구청, 대구경찰청이 기독교 세력에 강한 압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권을 위한 도정에 피하지 않고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임금체불 항의 태이저건 쏜 경찰, 형사 입건까지...공권력 남용 논란

지난 10월 22일 오후, 경북대병원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와 민주노총대구본부 등 노조 간부와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하청업체 노동자 10여 명은 하청업체 대표에 퇴직금과 체불임금 약 3억 원을 받기 위해 사장 전 모 씨(72)의 집을 찾았다. 이들은 전 씨가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며 항의했다. 이에 전 씨는 주거침입이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테

4차례 쓰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조직국장 박소영(30) 씨에 대해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사장 집 앞에서 퇴직금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테이저건을 쓴 경찰에 대해 민주당총과 대구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은 "적법한 사용"이었다고 반박하며, 추가로 노동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구시 중구 서문로 대구중부경찰서 앞에서 민주당총, 인권운동연대 등 대구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2일 노동자에게 테이저건을 쓴 대구중부경찰서 삼덕지구대 소속 김 모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했다. 테이저건은 1회 발사 시 5만 볼트의 고압 전류를 흘려 인체를 마비시키는 위험한 무기다. 국제엠네스티에서도 사망사례가 다수 보고됐으며 특히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경찰청은 과도한 테이저건 사용으로 인해 지적을 받았다.

□ 인터넷신문 등록 규제, 85%의 인터넷신문사 해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1일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인 등록요건을 5명으로 늘리고, 이들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 개정안을 모든 인터넷신문에 적용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개정안의 목적에 대해 "사실 확인 가능 및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여건(취재, 편집 등)이 제고될 필요"와 "인터넷신문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뉴스 전달 과정 및 여론형성에 있어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언론·시민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며 "언론통제"라며 반박했다. 언론의 현실적 문제로 ▲ 사실확인 기능과 저널리즘 제고는 기자 인력 수가 아닌 기자와 언론사의 역량의 문제며 ▲ 인터넷신문이 기자 4명이면 안되고 5명이면 된다는 논리는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점 ▲ 선정성과 어뷰징, 유사언론행위 문제는 포털사이트에 주로 검색되는 중대형 언론사가 더 심각한 점 ▲ 소규모 대안언론은 특정 영역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5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 '1인 미디어 시대' 추세에 맞지 않는 '시대역행'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대구지역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법조계는 법을 따질 가치가 없을 정도라며 개정안의 법적 문제를 지적했고, 언론계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터넷신문을 없애 역사 교과서 국정화'처럼 오직 말 잘 듣는 하나의 언론만 두겠다는 시도라며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요구했다.

□ 경찰, '신은미 콘서트' 연 대구 시민단체 계좌 압수수색 논란  
서울지방경찰청이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신은미(54)씨와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41)씨의 지난해 토크콘서트를 주최한 대구 시민단체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이를 6개월 만에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는 7월 7일 지난해 12월 9일 6.15대경본부가 대구 동성아트홀에서 연 신은미·황선 통일토크콘서트와 관련해 경찰이 본 단체 계좌 거래내역 1년치를 무단으로 압수수색했다며 단체와 개인 통장 50여건 인적사항도 수집하고 이를 6개월 뒤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계좌의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지난 1년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며, 이 단체와 해당 기간 동안 거래한 단체·개인 통장 계좌 50여건의 인적사항도 수집했다. 이와 관련해 6.15대경본부는 7월 7일 성명서를 내고 공안정국 조성과 종북몰이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 목적과 무관한 개인 인적사항 정보 공개 요청은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 < - 금급시설의 인권침해>

□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한 시민의 구속, 표현의 자유의 정면 도전  
4월 30일 오전, 대구수성경찰서는 해당 전단지를 제작한 시민 박 모(41) 씨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당일 저녁 대구지방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전단지를 제작한 박성수 씨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대구지역 인권시민단체는 5월 28일 토론회를 열어 "대법원 판례가 지적하듯이 국가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다. 박성수 씨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현 정부 정책이나 국정 운영방식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본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타인에 대한 관용 및 이해의 척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점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은 다양한 시각과 의견, 방식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사회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의식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법원과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였다.

□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 다시 청구, 판사가 앞장서 공판기일 연장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작·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6개월째 구속 기소돼 재판받을 받고 있는 동글이 박성수(42, 군산)씨에 대해 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4월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박 씨 등이 진행한 '전단지 공안몰이 비판' 기자회견이 집회시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 기자회견으로 박 씨는 연행돼 대구구치소에 갇혔다.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을 제한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 전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 만료 기간을 앞두고 추가된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변호인 측은 "법적 문제는 없지만, 이례적인 경우"라고 했다. 문제는 박성수 씨가 추가된 사건과 관련해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 씨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검찰은 이를 미신고집회로 보고 있다.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법리적 다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다시 진행됐다. 재판부는 10월 27일 전까지 박 씨에 대한 또 한 번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할 예정이다.

□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그린 시민, 벌금 100만 원이 선고  
지난 5월 15일, 김도형 대구지방법원 판사(제7형사단독)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시민 김 모(21)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푸가지'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김 씨는 지난 1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생가 터 인근, 동성로 야외무대 등 대구 변화가 다섯 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래피티 '파파치킨'을 그린 바 있다. 당시 중구청은 대구중부경찰서에 신고했고,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11월 말 기소건의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김 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했으나, 김 씨의 불복으로 정식 재판이 열렸고, 1심 패소한 것이다. 변호인 측은 이날 판결에 '과잉죄'가 적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민 변호사(법무법인 반석)는 "재산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 재물손괴라 (그래피티는) 재물손괴로 보기 어렵다. 또한, 다른 그래피티는 두고 유독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래피티만 문제삼아 기소한 것은 사실상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래피티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예술로도 볼 수 있다. 이 정도까지 형사 처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 청도 송전탑 공사 저지 시민 구속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던 시민이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1부(부장판사 김태규)는 9일 시민 최 모씨(33)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6개월의 단기 실형을 선고하고 최 씨를 구속했다. 최 씨는 2014년 7월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난 바 있다. 이후 최 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최 씨의 구속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경찰은 최 씨가 경찰의 목을 찰라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최 씨는 당시 현행범 체포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최 씨는 이후 경찰이 주인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모자를 벗겨 던졌고, 이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경찰이 제출한 체증 영상을 봐도 목을 졸렸다는 경찰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닌다. 경찰은 체포 이후 혐의가 없다고 풀어줬다”며 “당연히 무죄 판결받을 것으로 봤다. 다른 관계자들이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데도 법원이 무슨 취지로 법정구속까지 한 것인지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 인권 >

□ 2015 대구 성평등 디딤돌상·걸림돌상 대구교대가 싹쓸이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3.8세계 여성의 날 기념 22차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가 2015년 대구지역 성평등 디딤돌상에 대구교대 총학생회, 성평등 걸림돌상에 대구교대 남승인 총장을 선정했다. 조직위는 대구여성단체연합 등 25개 단체로 구성되었다. 대구교대 성희롱사건은 지난해 8월 남승인 총장은 학생해외문화탐방 중 성추행·폭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학생과 지역 여성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총학생회와 대책위원회는 성희롱, 성폭력 문제 해결 전문기구 설치와 전문가 배치,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총장 사퇴 등 5가지를 요구했다. 대구교대 성희롱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남승인 총장은 자기의 행동이 성희롱인지 아닌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 당시 교대 총학생회는 대처를 잘했다.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학우애를 발휘했다고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 포항 영포새마을금고의 성추행 파면 간부, 적반하장 복직 요구  
 경북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 남성 간부가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파면된 후, 복직을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해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포항남부경찰서는 성추행 혐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영포새마을금고 남성 간부 A 씨가 여성 직원 4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포항남부경찰서는 사건을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25일, 포항여성회 등 1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영포새마을금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의 재심청구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가해자는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고, 새마을금고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성폭행' 혐의 (전)심학봉 의원, 검찰 첫 소환조사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54.구미 갑) 의원이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서영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심 의원의 성폭행 혐의를 조사한다. 검찰은 피해 여성(48)에 대한 심 의원측의 회유나 협박 시도가 있었는지, 사건 당시 강

제성이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대구 한 호텔에서 여성 A씨(48)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경찰에 3차례나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심 의원은 한 차례의 조사도 받지 않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심 의원은 지난 8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며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밝히고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어 같은 날 밤 9시 30분 심 의원은 대구지방경찰청에 출석해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당시 심 의원은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사 다음날 4일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겨우 2시간 조사로 무혐의 결론을 내자 '뉘시기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때문에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 하기로 했다. 게다가 성폭력 범죄와 무관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회는 제명안을 이달 13일 본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 사라진 미혼모 쉼터...'대책' 없는 대구경북 지자체, 새 쉼터는 아직 공사 중..  
 대구경북지역 임신미혼모 엄마와 아이들이 거처할 수 있는 쉼터가 한 곳도 없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공사 중"이라고 했고, 경북도는 "예산이 없다"고 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북 미혼모 쉼터는 한 곳도 없다.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해림원'과 경북 경산시 '샤론의집'이 유일한 미혼모 쉼터였으나,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입양 기관 미혼모 쉼터 운영을 금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시행해 2곳 모두 6월 30일자로 폐지됐다. 때문에 대구시는 수성구 황금동 여성청소년지원시설 '가톨릭 푸름터'를 7월 1일부터 신규 미혼모 쉼터로 기능 전환해 문을 열기로 하고, 5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완공 예정일이 지나도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해림원의 미혼모들과 아이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게 됐다. 또 신규 쉼터가 완공되도 수용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돼 미혼모들이 모두 입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북도가 새 쉼터를 만들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구경북지역 전체를 통틀어 출산 전 미혼모가 머무를 수 있는 쉼터는 푸름터가 유일하게 됐다. 통상 최대 수용 인원의 80%만 입소시키는 점을 고려하면 새 쉼터 입소자는 35명에서 40명 안팎이다. 입소 가능 기간도 최대 1년에 불과하다.

<이주노동자 인권>

□ 출입국관리소 단속중 이주노동자 골절상... "실적채우기 단속중단"  
 대구시 북구 침산동 한 공장에서 일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출입국의 단속을 피하려다 골절상을 입었다. 이주노동자인권단체는 사업주와 사전 동의 없는 무리한 단속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지만, 출입국은 사전 동의는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 대구이주민선교센터는 지난 13일 대구시 북구 침산동 한 공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 A씨에게 자신이 회사에서 다리를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다리에 염증과 골절이 심해 당장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산업재해 처리를 위해 사고 경위를 알아보던 대구이주민선교센터는 출입국의 단속을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 게다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분명히 사업주의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보호요청서를 보여주지도 않았고, 미란다 원칙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출입국이 단속할 때 공통적인 규정 위반이 사업주 동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호명령서를 제출하지 않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여성 이주노동자를 남성이 단속하는 일도 수없이 발생하고

이 모든 위반 사항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대구·경북 이주단체 대표자들의 약속 사항이었다. 실적에만 목을 맨 대구출입국관리소장에게 합당한 지위는 소장이 아닌 징계 사외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 인권 >**

□ 대구시의원, 청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  
7월 24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제235호 제3차 본회의를 앞두고 오철환 대구시의원(기획행정위)이 대구청년유니온에 한 말이다. 청년들은 미성숙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청년에서 청은 푸를 청, 익지 않았다는 뜻이다. 익으면 빨갭게 되는데 청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다" 대구청년유니온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대구시의회 앞에서 오철환 의원의 '청년비하' 발언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이었다. 청년유니온은 "대구시에는 청년을 위한 어떠한 조례도 없다. 그래서 시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지만, 누구도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지역의 청년 유출을 막고 청년소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청년위원회에서 논의해도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청년위원회에서는 청년 조례 제정, 청년센터 건립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위원회의 역할은 '논의'에 한정돼 정책 입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다. 청년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한 대구시의회는 청년을 폄하하거나 미성숙존재로 사고하고 있다.

□ 3차 면접까지 봤는데 합격자가 없다...대성에너지 '채용 감질'  
(주)대성에너지가 지난 4월 시작한 2015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예정에 없던 영어 면접을 추가하고, 결과적으로 전원 탈락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대성에너지는 "갑작스런 국제 유가 하락으로 안타까운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지만, 한 취업커뮤니티에서는 "갑질이란 게 이런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공채에서 2차 면접 합격자는 모두 19명이었다. (주)대성에너지는 애초 신입사원 10~12명을 뽑을 계획이었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서류 전형-실무 면접-임원 면접을 거친다. 2차 면접이 최종 면접이라 여겼던 합격자들은 2차 면접에서 대성그룹 창시자의 자서전 '은혜 위에 은혜'를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받았다. 그리고 얼마 후 최종 발표가 아닌 3차 면접이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갑자기 잡힌 3차 면접 현장은 앞의 1차, 2차 면접과 달랐다고 한다. 예정에 없던 영어 발표도 추가됐다. 예정에 없던 3차 면접까지 마친 지원자들은 일주일이면 나온다는 최종 발표를 보름가량 기다려야 했다. 6월 26일 3차 면접 후, 7월 15일에 문자로 탈락 통보를 받았다. 결국 곧 한 취업커뮤니티에서 '대성에너지 갑질, 지원자 전원 탈락'이라는 글을 통해서 전원탈락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아동 · 청소년 인권 >**

□ 대구 을지연습 '서바이벌 사격체험'에 어린이 참여 논란  
대구시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했다. 문제는 대구시청 앞에 마련된 체험부스에 다수의 어린이가 참여한 것이다. 을지연습 기간 중 "시민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대구시가 마련한 서바이벌 사격 체험 등의 행사에 어린이들을 대거 참여시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사격 체험에는 참석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어린이 사격 체험 참여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비판 글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19일까지 체험부스 참가 시민 1,300여명 중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참가한 인원은 17일 20명, 18일 30명, 19일 55명이었으며, 20일의 경우 어린이가 150여 명 이상이 참가했다. 체험부스에는 ▲ 서바이벌 사격 체험 ▲ 군인 군장 메기

▲ 특전 위장 체험 ▲ 태극기 탁본 및 군번 줄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안보 관련 교육도 있었다.

**< 성소수자 인권 >**

□ 지역 첫 성소수자 인권단체 "무지개인권연대" 출범  
무지개인권연대는 대구의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 치열한 활동 속에서 태어났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성소수자 축제가 열려온 곳인 만큼 7회째 축제를 이어오며 성소수자 혐오단체로부터 크고 작은 방해로 받아오던 터였다. 무지개인권연대는 1월 23일, 대구시 중구 수동 오오극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정부기관과 성소수자 혐오집단들의 폭력에 대해 대응활동을 하면서 대구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소수자는 어느 한 구역에 모여 살거나 특정 직업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며 연령대도 다양"하다며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정체성,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편견이 당연시된다.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 대구퀴어축제, 국가기관과 종교세력의 탄압에도 '사랑'과 '자긍심'이 혐오 이겼다  
7월 5일 오후 2시부터 대구시 중구 대구백화점 앞 무대에서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혐오남남'이 열렸다. 이날 축제에는 무지개인권연대 등 22개 단체가 사전 마당을 열었고, 2시간여 동안 공연이 이어졌다. 축제에는 1,000여 명(경찰 추산 500명)이 모였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공동대표는 "우리는 그동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며 364일을 견뎌왔다. 이 축제 하루가 우리에게 일 년을 버티는 힘이었다"며 "그동안 사회에서 훼손된 자존심을 회복하고, 앞으로 또 1년을 우리의 자긍심으로 더 당당하게 걸어갔으면 좋겠다"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2시간여 무대 행사가 끝나고 '자긍심 퍼레이드'가 시작했다. 퍼레이드가 시작하자마자 한 기독교회장으로 이 모 씨가 오물을 투척해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씨는 플라스틱 컵에 오물을 담아와 퍼레이드 상징 현수막에 여러 차례 뿌렸다. 이 씨는 현장에서 연행돼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 장애인 인권 >**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탈시설 정책에 역행하는 장애인 수용 시설, 반대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 단체의 지적은 물론, 여론도 좋지 않다. 최근 구미SOL복지재단에서 거주 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으로 관계자 20명이 징역 등을 선고받았으며, 경주 선인재활원이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불법으로 입소시키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대구장애인단체가 새로운 장애인 시설을 만들려는 청인재단에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인재단은 2012년부터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에 장애인 거주시설 확충사업을 시작했다. 이 때문에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 수성구 청인재단 사회서비스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수용 시설 확충 정책을 재검토해 철회, 반환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복지확대에 힘쓸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에서 현재 1,600여 명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역사회가 아닌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살아간다. 이 중 70%가 '지자체가 지원한다면 시설에서 나오고 싶다'고 대구광역시외의 방안에 나와 있다"며 "장애인 정책이 수용시설 확충이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폭행사건 H대, 피해자지원·재발방지대책 마련 약속

2015년 H대 관광호텔항공과에 입학해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피해자 A씨는 가해학생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고, 6월 23일부터 언론보도가 시작됐다. H대 측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학교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 "맞을 짓을 했다"며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7월 1일 피해자 가족과 대구경북지역 장애인단체는 '경산 대학생 집단 폭행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달여간의 투쟁과 노력 끝에 상호 합의했다. H대학은 ▲ 피해자 및 가족에게 직접사과 ▲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 지원과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한 전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기숙사 및 장애학생 인권 실태조사 실시 ▲ 전 교직원 및 학생 대상의 인권교육과 성교육 실시 ▲ 장애학생지원센터 실태점검 및 기능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대책위와 협의 하에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 대구 동구주민, 장애인 시설 반대에 '장애인 비하' 현수막 걸어

대구 동구 신기동 주택협동조합 '공터' 건물에 민간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두고 조합 측과 인근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 명의로 장애인을 '장재적인 범죄자'로 비하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공터 인근 한 폐기물 집하장. 전봇대와 가로수 사이에 '발달장애인이 2세 아기를 3층에서 던져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동구청에서 허가해 주려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구 아래에는 '신기동 주민 일동'이라 적혀 있다. 현수막에 언급된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부산 사하구의 한 복지관에서 발달장애 1급 A(19)군이 2세 아이를 3층에서 1층 바닥으로 던져 숨지게 한 일을 일컫는다. 이 사건에 빚대 주민들이 장애인시설 용도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공터' 조합원들은 "장애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 비하"며 "이 같은 인권모독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자폐성 발달장애 1급 아들을 키우는 차기영(43) 씨는 "비장애인들이 저지르는 흉악 범죄가 훨씬 많은데,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을 들어 시설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논리를 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 구멍 난 제도에 고통 받는 장애인 공무원, 법개정이 되었지만 근로지원 전무

공무원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인 제도의 법률상 근거가 모두 마련됐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장애인 특수교사인 조민제(가명, 31) 씨는 날이 갈수록 눈치밥을 먹었다. 학습 자료 제작, 출장 시 이동 등 신체적 도움이 필요할 때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얻었지만, 동료의 부담도 늘어나고 조 씨도 마음이 불편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된 조 씨는 2011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 씨는 법률상 노동자가 아닌 공무원이라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조 씨는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2014년 인권위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인 중증장애인에게도 근로지원인 제도를 제공토록 권고한 이후 2015년 5월 장애인 공무원에게도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수 있게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됐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등은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제도 현실화를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2016년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제도 시행이나 예산 편성에 대한 대구시와 교육청의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고속버스 승객이 될 수 없는 장애인..."추석, 고향 가고 싶다"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울산과 인천행 고속버스는 표를 구매한 승객을 태우지 않고 떠났다. 출발 10분 전부터 고속버스에 탑승하려던 장애인 10명은 고속버스 출입구 계단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떠나는 버스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고속버스 탑승을 시도하던 장애인들은 "법을 지켜 달라. 우리도 고향에 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을 포함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 시·도 간을 오가는 광역 및 고속·시외버스는 총 9,574대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 40대만 저상버스다. 고속·시외버스 가운데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한 대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교통약자의 고속버스 접근권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에 예산 16억 원을 편성했지만, 최종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에 제출한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 장애인 수용시설 속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 "발달장애인 일시키고 월 5만원 지급"

대구 북구 모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아래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와 운영비리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사실이 있었다. 이 사건은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와 인권침해, 입소자 통장의 부적절한 관리 등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비리 의혹이 해당 시설에서 14년 간 근무했던 종사자에 의해서 제보되며 알려지게 되었다. 이 소식은 오랫동안 지역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집단 수용방식의 복지체계가 지니는 구조적인 한계와 반인권성을 폭로하며, 시설 내 인권개선과 대안적인 탈시설 정책추진(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요구해 왔던 우리에게 또 다시 절망을 안겨주었다. 2012년 대구광역시의 조사에 의하면, 수용시설로 자발적으로 입소한 장애인은 전체의 7%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 외에는 무연고, 무의탁자이거나 주변인들의 강제 또는 권유로 인해 사회에서 배제되어 시설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시설에 입소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인간성과 인권을 어느 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 빈곤·생존권 >

□ 장애인 언니 둔 20대 자살...기초법·복지 사각지대가 만든 비극

시설에서 퇴소한 지적장애인 언니를 둔 20대 여성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월 24일 오전 10시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 한 식당 주차장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A(28)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식당 주인이 이를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두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재가하면서 연락이 끊기자 광주 친척집에서 자랐다. 이후 대구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B씨는 2012년 1월 대구 동구의 한 장애인시설에 입소했다. 담당인 시설 생활이 힘들었던 B씨는 결국, 올해 1월 14일 시설에서 퇴소했다. 지난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던 A씨는 생활고와 함께 언니 B씨의 부양을 힘들어했다.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가 언니 B씨의 퇴소 이후 자살까지 선택한 데는 복지의 사각지대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언니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송진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했다. 현 기초생활보장법 아래에서 장애인 언니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동생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없어도 무작정 일자리로 내몰려

현행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을 권리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점과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현행 근로능력판정제도의 문제점이 주요하게 지적됐다. 빈빈곤네트워크, 대구광역시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월 3일 오후 2시 국

2층 세미나실에서 '근로능력 판정과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사업'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때문에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들에게 자활이 아닌 무조건적인 취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 정부 '복지재정 효율화' 요구, 대구시 복지재정 축소 우려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를 요구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사업비 축소를 요구해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당장 정부 지원만으로 부족해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 등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사보위)는 8월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이 다수 있다"며 복지사업 정비를 요구한 바 있다. 사보위는 이번 정보로 절감된 재원은 자체 사회보장사업에 재투자하면 된다고 했지만, 시민사회는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대부분 정부 시행 사업의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라 "유사 중복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보위에 따르면 ▲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 노인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지원 ▲ 장수 수당 ▲ 저소득층 교육지원 ▲ 경로위생 수당 등이며, 규모는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사업 총 56개 227억 원에 달하는 복지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반빈곤네트워크,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권역진 대구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 >

□ 대구지방법원, "청도송전탑 농성 주민, 한전에 최대 9,600만원 지급하라"

대구지방법원은 한국전력이 송전탑 공사를 방해했다며 청도 상평리 주민을 상대로 낸 집행문 부여 소송에서 주민 5명이 각각 이행강제금 1,920만 원씩, 합 9,600만 원을 한전에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공사장 진입로에 설치된 망루가 공사를 방해했다고 했지만, 입구에 설치된 장승도 공사를 방해했다는 한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10일, 원고 한전이 청도군 각북면 상평리 주민 이 모씨(77) 등 5명에 대한 집행문부여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피고에 대한 각 1,920만 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각 집행문을 부여하라"고 판시했다. 이행강제금 1,920만 원은 2014년 4월 16일부터 공사가 재개를 앞둔 같은 해 7월 20일까지 96일 동안 매일 부과된 20만 원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표결로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4월 재가동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27일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원안위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상임·비상임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은철 위원장 주재로 제35회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를 심의해 날짜를 넘긴 마라톤 심의 끝에 27일 새벽 재허가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 표결 참가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 월성1호기는 1982년 발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났다. 이미 조기 노후화가 진행되어 50여 차례의 고장 및 사고를 일으켰고, 다량의 삼중수소를 배출해 주민 건강을 위협해왔다.

□ 국민 물 먹이는 세계물포럼? "물 사유화 위한 것" 지적

제7차 세계물포럼은 4월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간 대구와 경주에서 열린다. 이에 맞서 전국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초

국적 연구소(TNI, Transnational Institute) 활동가 등 필리핀, 일본, 캐나다, 홍콩의 단체 활동가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세계물포럼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베올리아(Veolia), 수에즈(Suez) 등 초국적 물기업의 시장확대와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세계 물 기업 포럼'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은 하수도의 경우 이미 베올리아를 포함한 순수 민간기업으로의 위탁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환경공단까지 포함할 경우 위탁 비율은 74.1%에 육박한다. 베올리아는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일부 하수도 사업을 위탁운영 중인데, 물포럼을 계기로 대구경북지역 진출을 꾀할 것으로 이들은 추측했다. 또한, 대구경북 진출을 위해 2014년 대구시와 경주시에 '성과기반 컨설팅'의 명목으로 상수도 민간위탁을 제안해 높은 상황이다.

□ 영덕군민...91.7% "핵발전소, 난 반달세"

영덕군은 지난 2010년 4만여 명의 군민 중 399명의 찬성을 받아 핵발전소 유치 신청했다. 이후 의견수렴 절차는 군청과 정부가 고른 대표자들을 불러 핵발전소와 지원정책을 맞바꾸는 식이었다. 그리고 11월 11일, 12일, 영덕 주민은 투표소로 직접 나왔다. 10,274명(91.7%)반대, 865명(7.7%)찬성, 18,581명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직접 서명했고, 그중 11,209명(60.3%)가 투표에 참여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산업부와 행자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 향응과 물품 제공, 관광보내기 등의 온갖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투표를 방해해왔으나 영덕군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성공시켰다"며 "이회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부는 주민투표에서 확인된 영덕군민의 민심을 에너지 정책에 반영시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영덕군민을 향해 동문서답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정부는 투표결과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지만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영덕군민이 계시다는 점을 정부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 상생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더욱 세심한 배려와 열린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도로공사, 천연기념물 1호 축백나무숲 주변 도로 공사...주민, "공사중단"

한국도로공사가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대구4차순환로) 도동IC구간 공사를 재개하자 지역 주민들이 대구시 동구 도동 축백나무 숲이 고사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천연기념물 제1호인 도동 축백나무 숲은 최근 10년간 1,150여 그루에서 700여 그루로 개체수가 감소해 지역 주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주민들은 경부고속도로·대구포항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했다고 보고, 한국도로공사에 대구4차순환로 공사를 축백나무 숲에서부터 520m 이상의 거리를 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구간 공사를 시작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협의의 위해 공사를 중단했지만, 8월 초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현재 도동IC의 끝 부분인 파관재삼거리에서 벌목작업과 횡단교량공사가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횡단교량공사를 두고 "주민과 시민사회의 동의 없는 공사"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 측은 "축백나무 숲과는 상관 없는 공사"라며 공사를 지속하고 있다.

<평화권>

□ 사드 배치...역설적으로 집권 여당이 한반도 평화 위협

새누리당이 한반도 내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총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한반도의 평

위협하는 결정을 내리려 한다며 한반도 내 사드 배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도 어기가 없는데 대구가 유력한 후보지라는 보도가 나와 황당하다며 사드 배치는 남북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집권 여당이 앞장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해선 안되는 일이라며 대구는 물론 한국의 어떤 곳에도 사드가 배치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새누리당 대구시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구 사무실, 새누리당 소속 대구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등 모두 10곳에서 '사드 배치 철회' 촉구 1인시위를 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유승민 원내대표 사무실 등 4곳에는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성명서를 전달했다.

### <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특별법으로 진실 밝혀야

국회 계류 3년째...대구 10월항쟁·보도연맹·가창골유족회 '백만 서명운동·유해발굴'

"이 나이 먹도록 아버지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오. 잇을 수가 없어요" 대구보도연맹가족회 부회장 김영호(66)씨는 18일 이 같이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의 아버지는 김씨가 2살이던 1950년 7월 8일 국민보도연맹사건에 연루돼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다.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가족들은 아버지가 갈 만한 장소를 샅샅이 찾았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가창골에서 학살됐다는 신문 보도에 김씨 아버지 이름이 나왔다. 벌써 65년 전 얘기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2005년부터 대통령 직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승만 정권 당시인 1950년 7~8월까지 우리나라 군인과 경찰에 의해 민간인 3천여명이 경산코발트광산 등에서 집단사살됐다. 주로 경산과 청도의 보도연맹원과 대구형무소 수감자들로 전쟁이 일어나자 북한군에 협조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희생됐다. 과거사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가창골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민간인 2천~3천여명이 집단사살됐다고 보고서에 나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로 정권 교체 후 과거사위 활동은 중단됐고 예산지원도 끊겨 진상규명 작업은 모두 중단된 상태.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이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 '83년 대구미문화원 폭파' 누명쓰고 고문·투옥당한 이들, 재심청구

1983년 9월 22일,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의 미문화원에 설치된 폭탄이 터졌다. 이 사고로 미문화원에 주둔 중이던 경찰 등 4명과 고등학생 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공안당국은 경북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이들을 주도자로 지목했다. 폭파 당시 인근 식당에 있었다는 이유다. 사고 다음날인 23일 체포되기도 했고, 늦어도 9월 안에 모두 관할 지서에 수감됐다. 이후 원대동 대공분실로 끌려갔다. 영장은커녕, 불법구금 상태로 고문을 당했다. 당당은 고문기술자 이근안이였다. 2015년 5월, 이들은 대구지방법원에 과거 국가보안법 등의 사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재심청구를 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일까. 함께 투옥됐던 피해자 故우상수 씨는 2010년 지병으로 타계했다. 2011년 대구지방법원이 발간한 '대구경찰30년사'에 당시 공식 기록이 남아 있었다. "북한의 남파간첩이 반미 투쟁선동을 목적으로 대구 미문화원에 부비추립형 폭발물 가방 2개를 장치한 것이 폭발한 것으로써, 당시 사용하였던 화약의 성분과 아용산 폭파사건에 사용한 화약이 동일한 북한군용 폭발물이 확인되어 북한 간첩의 소행으로 판명되었으며, 6년 후인 1989년 9월 17일 강화도로 귀순한 북한 작전부 개성연락소 소속 간첩 서영철의 진술에 의해 북한 조사부 소속 공작원 이철의 소행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심재판이 열리게 되면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 행위의 사실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외에도 이들이 유죄 판결 사유였던 '시위예비운동', '반국가단체 고무·찬양·동조',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다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 - 참 고 -

<Good News>

● 대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개관

대구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12월 5일 문을 연다. 역사관 건립이 추진된 지 6년 만이다. (사)정신대활동녀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12월 5일 오후 2시 회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중구 경산강영길 50) 2층 공관회움에서 개관식을 연다고 밝혔다. 역사관은 1920년 지어진 2층짜리 일본식 건물을 리모델링해 일본군 위안부 역사와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 공간이자 기록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된다. 역사관은 지난 2010년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순악 할머니가 "역사관을 만들어달라"는 유언과 5천만원을 남기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역사관 건립에는 시민모임의 거리 모금과 '회움' 상품 수익금, 여성가족부의 지원금 등 12억5천만원이 들어갔다. 지난해 8월 착공했으나, 건물 보강 공사와 전시 기획 등의 이유로 세 차례나 연기됐다. 안이정선 시민모임 대표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을 통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계신다"며 "몇 년에 걸쳐 역사관을 준비해왔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 반인권적 거리급식에서 실내 무료급식소 개소, 이제 눈비 걱정 없어요

동대구역 일대에서 아외 무료급식소가 운영됐으나, 2013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공사로 터를 잃게 됐다. 2014년 5월부터 인근 지역 교회 등 10여 군데에서 개별적으로 무료급식을 시행했다. 이후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실내 무료급식소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자 반빈곤네트워킹 등 관련 단체에서 대구시에 실내 무료급식소 설치를 요구하였다. 이후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7월 15일부터 대구시 동구 신천동 동대구새마을금고 2분소 지하 1층에서 운영되는 무료급식소 '희망나눔의 집'은 구세군이 운영한다. 희망나눔의 집은 198㎡ 규모로, 동시에 최대 120명이 입장할 수 있다. 점심 배식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저녁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이외에도 점심 배식 이후인 오후 2시부터는 매주 화요일 한글교실, 수요일은 노래교실과 인문학 강좌, 목요일은 경제교실과 취업상담을 한다. 월 1회 무료법률상담과 무료진료도 할 계획이다. 반인권적 자존감 결여의 거리급식을 해소하고 노숙인과 어려운 이웃에게 편안하고 위생적인 급식공간을 제공해서 정신적 빈곤을 채우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등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정 구속되었던 청도 송전탑 반대 활동가, 항소심서 무죄

청도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법정구속됐던 활동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화)는 15일 청도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당대구시당 최창진 위원장(34)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부장판사 김태규)는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시위대들과 함께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이를 막아서고 있던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 오류를 지적했다.

복지시설 뒤 금속공장 '불허', 장애인 인권 지켰다

경북 고령군 어곡리 중증장애인 102명이 사는 '성요셉재활원' 뒤 금속공장 건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10일 경북 고령군(군수 박용환)은, 부동산개발회사 ㈜창원KJ산업(대표이사 김정년)이 올해 4월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산1번지 일대 금속공장 신설 승인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해, 건립 여부 결정을 위한 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다. 고령군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현장 조사 등을 벌인 뒤 최종 '부결' 결정을 내렸다. 공사 예정부지인 어곡리 성요셉재활원 뒷산 일대 현장 방문 후 '장애인 재활원과 공장 부지가 너무 인접해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결국 공장 설립이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장 예정부지와 성요셉재활원의 최단 거리가 4m 밖에 안되고, 50m 안에는 성산초등학교, 100m안에는 성산중학교가 있어 장애인과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들은 서명운동과 집회, 기자회견 등을 열고 공장 건립에 반대해왔다. 현재 재활원에는 지체·지적장애를 가진 1급 장애인 98명, 2급 장애인 3명 등 102명의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 경북지역 교사 2명, '국가보법' 누명 벗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오던 경북지역 교사 2명이 재판 2년만에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터넷에 유포된 북한 게시물을 단순 복사해 인터넷 카페에 올린 행위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사 강동원)은 1일, 인터넷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올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된 교사 배용한(65)씨와 박무식(53)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문건, 사진, 영상물 등의 게시물은 이적표현물로 보는 것이 합당하나 대부분 이미 인터넷에 유포된 것"이라며 "목적은 따져봤을 때 단순히 게시물을 복사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게시물이 국가의 존립, 안전, 기본질서 등에 어떠한 해악이나 위협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소 당시 경북 의성군과 영양군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던 배용한씨와 박무식씨는 '안동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으로 지난 10여년간 통일운동을 펼쳐왔다.

● 대구 청암재단, 장애인 거주 시설 "탈시설화" 선언

대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한 재단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재단의 공공화와 탈시설화"를 선언했다. 대구시청 앞에서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은 '청암재단 공공화와 탈시설을 위한 선언'을 통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인(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이 스스로 법인 공공화와 탈시설화를 선언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대구시 동구에서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암재단은 1957년 설립되었다. 지난 2004년 말 국고 보조금 횡령과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 등이 내부고발로 폭로되어, 이후 7개월간 진상규명을 위한 노조 설립 ▲ 동구청의 재단 고발 ▲ 시민단체와 함께 공대위 구성 ▲ 노조와 재단이 합의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이후 청암재단은 지역 장애인단체로부터도 '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들은 "과거 청암재단은 개인의 재산 축적 도구로 전락해 온갖 인권유린과 비리로 구성원이 고통받았다. 이후 이용자와 노조, 지역 시민사회와의 협력, 투쟁을 통해 민주재단으로 거듭나며 법인 운영 민주화와 자산 공공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됐다"며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와 배제 위에서만 존재한다. 시설이 나서서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탈시설 전환과 당사자의 자립생활 지원해야 함을 알게 됐다"고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선언 이후 이들은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 법인 자원 국가

및 지자체에 기부채납 ▲ 법인의 사적 운영 방지 위해 이사장과 이사의 정기적 연임 금지 ▲ 구체적 실행을 위한 법인 이사회, 거주시설 이용자회, 노조, 지역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실행위원회 구성할 계획이다.

● 경북 군위에 경북 도내 첫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건립

군위군은 경북 도내 처음으로 군위를 '사라온 마을' 송덕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 7일 제막식을 가졌다. 군위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사공은자)는 지역의 뜻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로 군민들의 성금을 모아 소녀상을 만들었다. 사공은자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 위원장은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군민들의 힘으로 의미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하게 됐다"며 "일제로부터 강제 동원된 피해 여성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한 작지만 강렬한 보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그간 고통과 오욕의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과거사 청산이라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따뜻한 군위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67주년 2015,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의

# “ - 인권을 노래하라!”

- 양심수와 함께,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인권주간(12월 8일(수) - 12월 18일(금))

67주년을 맞아 대구경북지역의 인권현실을 되돌아보고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를 되물어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1. 2015,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목적

세계인권선언 67주년을 계기로 한국사회 인권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성찰하며 세계인권선언을 현재적 의미를 오늘날에 되살리기 위한 공동의 공감대를 2015년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2. 2015,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목표

세계인권선언 67주년을 계기로 대구경북 인권현실을 현재와 과제를 도출 대구경북 인권주간을 통하여 오늘날의 인권증진의 의미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 3. 2015,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세부사업계획

### 1. 기 조

- 대구경북 인권주간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인권증진 및 인권침해 사례를 대중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2015, 대구경북 인권주간은 지역의 민중의 노동권 침해, 표현의 자유의 침해사례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확인되었던바 내용적으로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 대구경북 인권주간 사업은 인권침해 당사자의 주체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 2. 슬로건

- 세계인권선언 67주년

2015,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 삶, 인권을 노래하라!

- 양심수와 함께,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첫 번째 초대

< >

2015,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및 인권주간 조직위 주간 사업발표

▶ 시 : 12월 10일(목) 오전11시 ▶ 장 소 : 대구구치소 앞

□ 두 번째 초대

<양심수에게 자유를! 양심수와 함께!>

정권과 자본에 대한 저항의 이름,

대구경북 양심수 11명을 만납시다

(주관 :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 양심수와 함께하는 릴레이 면회와 서신을 진행합니다! ▶ 집중면회 : 12월 8일(화) ~ 18일(금)

- 교도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정경학(재야/40번) 노수희(재야/23번) 김덕용(재야/27번) 이상호(재야/33번) 이길우(노동/1374번) 김호영(노동/2040번)
- 안동교도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상리3동 121) 전식렬(재야/3020번) 임순택(재야/3010번)
- 경주교도소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550) 최해술(노동/238번)
- 대구구치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 박성수(재야/1084번)
- 수원구치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박창숙(재야/8번)

□ 세 번째 초대

< 씨 송환을 촉구하는 토크쇼 및 기사외견 >

(주관 : 평양주민 김련희 씨 송환 촉구 사업을 위한 대구경북준비모임)

■ 평양주민 김련희 씨 송환촉구 신문광고 및 선언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 12월 8일(화) 오전 11시 /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앞

■ 평양주민 김련희 씨 송환을 위한 토크문화제 ‘집으로 가는 길’

▶ 12월 10일(목) 오후 7시 / 오오극장

### 네 번째 초대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기도회>

(주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NCC))

■ 인권 침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을 말씀으로 인도하며 인권상 시상 예정

▶ 시 : 12월 15일(화) 오후4시 ▶ 장소 : 구세군 대구 제일영문(교회)

### □ 다섯 번째 초대

## <2015, 대구경북인권보고대회>

▶ 일 시 : 12월 18일(금) 오후7시 ▶ 장소 : 영남일보 강당(지하)

2015, 대구경북 인권기록영상 상영

- 거리에서 저항하였던 인권침해 당사자의 증언 그리고 공연
- 함께 나누며 우리를 위로하는 문화 공연
- 함께 낭독하는 세계인권선언문

### 2015,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 053)290-7474)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민예총(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장애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YMCA 민주노동당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민중행동 인권교육센터오리알(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정의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천주교대구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포럼다름대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NCC) 한국인권행동 4.9인혁재단 615대경본부

### [기자회견문]

양심수와 함께!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인권과 우리의 존엄을 위해, 우리는 전진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 세계인권선언 67주년을 즈음하여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 동안 모든 대륙과 바다에서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은 5천만 명에 이르는 생명을 앗아갔다. 인류가 겪은 전쟁과 잔학 행위의 참상을 기억하며 전쟁과 잔학행위에 대한 인류의 반성과 성찰의 다짐이 <세계인권선언>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중하고 존엄하다고 인권은 말한다. 하지만 2015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인권뉴스들을 들여다보며 질문을 한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 것일까? 어떤 이들은 현실에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청소년, 시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가지 이름들을 통해 만나는 사회적 소수자와 민중들은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 2015년 추운 겨울, 대구구치소 앞에서 도대체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가진 자를 위한 정책으로 사회적 소수자와 민중들의 삶이 더욱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와 민중들은 저항으로 맞설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폭압성은 날로 그 기세를 높여가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 노동자 그리고 민중들은 서울대병원에 누워있는 농민 백남기씨처럼 공권력에 의해 폭력에 도출되거나 대통령을 비판하였다는 죄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성수씨와 양심수처럼 구속수감이 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 슬픈 인권선언일, 오늘 의 모습이다.

'사람'에게 붙여지는 여러 존재의 이름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은 나만 억울한 것이 아닌 세상에는 억울한 '우리'가 많다는 것을 알려준다. 오늘 우리는 많은 존재의 사이를 넘어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누군가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 인권의 역사는 다양한 현실의 이름을 넘어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 투쟁은 계속 되고 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은 여전히도 간절한 우리의 바람이다.

우리는 사람이다. 더 이상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 내는 당당한 노동자이다. 시설에 갇혀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불쌍한 몸이 아니라, 이 사회에 다양한 몸과 속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애인이다. 누구에게나 열린 광장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고 외치는 성소수자이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역사의 원칙이 '인간 존엄'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억압과 차별에 호통 치는 투쟁하는 자들의 목소리이다. 힘겹지만 당당하게, 분노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인권'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외치자!

2015년 12월 10일

**2015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